

국제학술회의

관동대지진 학살사건과  
역사수정주의 문제



##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립기념관이 공동주최하는 ‘관동대지진 학살사건과 역사수정주의 문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웹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격려해주신 유기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독립기념관의 한시준 관장님께도 감사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8년 전 관동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발생한 재일한국인 학살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연재해를 빌미로 자행된 학살사건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에서 야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살사건 자체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재일한국인 차별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혐한의 풍조가 심화되면서 역사수정주의 세력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동향을 공유하고 관동대지진에서 비롯된 학살사건에 대한 오늘날의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90주년이 되던 2013년 8월 22일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에 관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강덕상 선생남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애석하게 올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0주년을 바라보며, 선생님이 계실 때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으로 다루지 못해온 것을 아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재단에서는 작년부터 학술회의를 시작했는데, 100주년을 목표로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편찬하고 단행본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표를 맡아주신 일본의 다나카 마사타카 교수님, 멀리 미국에서 참석하신 이진희 교수님, 한국에서 1923제노사이드연구소의 성주현 부소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의 서종진 연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토론회 사회를 맡아 논의를 풍요롭게 이끌어주실 김광열 교수님을 비롯하여 김도형, 강효숙, 배영미, 이경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 자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일 양국 간의 역사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실마리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 영 호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 관장 한시준입니다.

오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역사수정주의 문제」를 주제로 저희 독립기념관과 동북아역사재단이 함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 학술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이 벌어진지 10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관동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사건은 지진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에 동요한 일본 민중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민중들의 분노가 지배체제에 미칠 것을 우려한 제국주의 일본 관헌 수뇌부의 기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국가권력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여 위기를 맞이하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를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여 조선인들을 뺨으로 규정하고 학살한 것이었습니다.

이 학살은 일제의 군경은 물론 민간인 자경단까지 조직적으로 동원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학살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및 사죄도 없이 일본정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연구는 강덕상 선생님, 금병동 선생님께서 의해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본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면서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센슈대 다나카 마사타카 선생님, 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 이진희 선생님, 1923제노사이드 연구소 성주현 선생님, 동북아역사재단의 서종진 선생님은 일제의 지배정책과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연구자들입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독립기념관 김도형, 배영미 선생님, 인천대 강효숙 선생님, 동북아역사재단의 이경미 선생님 또한 이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성과를 발표한 연구자들입니다.

이 같은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더욱 새롭고 의미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께 응원의 박수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를 기획하고 개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 이영호 이사장님과 1923제노사이드연구소 김광열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동대지진에 관심을 갖고 동북아역사재단 및 1923제노사이드연구소와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진행하여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 100주기가 되었을 때 보다 더 완성도 있고 발전된 학술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준비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가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해 학술적 제언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독립기념관 관장 한 시 준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기홍입니다.

<관동대지진 학살사건과 역사수정주의 문제>라는 주제의 뜻깊은 학술회에 비대면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연구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고, 냉각된 한일관계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금부터 98년 전 발생한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을 되짚어 보고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정오 즈음에 발생한 매그니튜드 7.9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제일 한국인,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들이 무고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과거사를 직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사회에서는 추도식과 위령제를 방해하는 보수우익 단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우려가 큼니다.

저는 지난 2013년, 관동대지진 90년을 맞이하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한 학술회의부터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원했습니다.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에 관한 연구와 역사교육이 조금씩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활동과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라는 측면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일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발굴과 진상 규명,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사교육, 기억의 계승, 진실된 추모식과 위령제 등입니다. 곧 있을 100주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학술대회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공유된 생각과 지혜들이 관동대지진 100년을 맞이하는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도 이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온라인 학술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의원 유 기 흥

# 목 차

- 개 회 사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영호
  - 환 영 사 : 독립기념관 관장 한시준
  - 인 사 말 : 국회의원 유기홍
- 
1. 미국 내 ‘역사전’ 현황과 간토대학살 연구에의 시사점 ..... 7
    - 이진희(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학교)
  
  2. 최근의 배외주의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리포트 ..... 15
    - 다나카 마사타카(센슈대학)
  
  3.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의 국내 연구와 일본 역사수정주의 동향 ... 31
    - 성주현(1923제노사이드연구소)
  
  4.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에 대한 역사교육 ... 47
    - 서종진(동북아역사재단)
- 
- 종 합 토 론 : 발표자 전원, 김도형(독립기념관), 배영미(독립기념관),  
이경미(동북아역사재단), 강효숙(인천대) 등



국제학술회의  
관동대지진 학살사건과 역사수정주의 문제

Program

시간	내 용
09:30 ~ 0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이 영 호 이사장(동북아역사재단)</li> <li>□ 환영사: 한 시 준 관장(독립기념관)</li> <li>□ 인사말: 유 기 흥 의원(국회의원)</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b>제1부</b></div> <div>사회: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div> </div>
09:50 ~ 11: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국 내 ‘역사전’ 현황과 간토대학살 연구에의 시사점 - 이진희(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학교)</li> <li>2. 최근의 배외주의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리포트 - 다나카 마사타카(센슈대학)</li> <li>3.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의 국내 연구와 일본 역사수정주의 동향 - 성주현(1923제노사이드연구소)</li> <li>4.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에 대한 역사교육 - 서종진(동북아역사재단)</li> </ol>
	<b>휴 식</b>
11:20 ~ 13:0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b>제2부</b></div> <div>종합토론</div> <div>사회: 김광열(광운대)</div> </div> <p>발표자 전원, 김도형(독립기념관), 배영미(독립기념관), 이경미(동북아역사재단), 강효숙(인천대) 등</p>





-국제학술회의- 관동대지진 학살사건과 역사수정주의 문제

---

# 미국 내 “역사전 (歷史戰)” 현황과 간토대학살 연구에의 시사점

---

이 진 희(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학교)



# 미국 내 “역사전 (歷史戰)” 현황과 간토대학살 연구에의 시사점

이 진 희(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학교)

발표자: 이진희 (Eastern Illinois University) jlee@eiu.edu

미국 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학교 사학과 종신교수 및 초대 동아시아학 과장 (2006-2019).

일리노이대학교 석박사 (근현대한일역사, 일본제국사 연구).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도쿄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 방문연구원 역임. 2019년 이래 하버드대학교 레이샤워일본학연구센터 연구원 역임.

**강연 초록 (Abstract):** 역사의 해석을 둘러싼 경쟁이나 역사 담론의 정치적 이용은 인류역사에 있어 낯선 현상이 아닌 반면,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전”을 둘러싼 배경과 특징은 그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어 온 미국과 일본 사회 내 부각되어 온 “역사전”을 둘러싼 담론과 그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이용과 관련한 현황을 소개하고, 놓쳐서는 안될 미-일 역사부정주의의 공통점과 주도 세력의 접점에 주목함으로써, 곧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간토대학살의 역사 서술과 교육에 있어 시사하고 있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미국 내 일제가 자행한 식민/전쟁범죄의 실태를 왜곡하고 있는 “역사전”의 움직임을 간토대학살 관련 서술을 예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 발표 개요 (Outline):

- I.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전” 담론 현황과 역사교육의 정치학
- II. 근년 부각된 미국사회 내 “역사전”의 배경과 특징
- III. 일본발 미국 내 “역사전” 양상과 미-일 역사부정주의의 접점
- IV. 세계사와 글로벌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본 현 “역사전” 양상의 문제점

## V. "역사전" 현상의 교훈에 비쳐본 간토대학살 관련 역사연구와 교육의 방향

## 관련 정보 추천 웹사이트:

## 램지어 사태 관련

<https://chwe.net/irle/>

<http://chwe.net/irle/letter/>

<https://apjff.org/2021/5/MorrisSuzuki.html>

## 세계사 교육 관련

The World History Association- <https://www.thewha.org/>

World History for Us All - <https://whfua.history.ucla.edu/>

The International Big History Association- <https://bighistory.org>

AP World History- <https://apcentral.collegeboard.org/courses/ap-world-history/course>

World History Connected-

<https://worldhistoryconnected.press.uillinois.edu/index.html#>

World History Matters- <https://worldhistorymatters.org>

The Network of Global and World History Organizations-  
<https://research.uni-leipzig.de/~gwhisto/home>

Roy Rosenzweig Center for History & New Media- <https://rrchnm.org/>

Sheg History Lesson Samples - <https://sheg.stanford.edu/list-reading-historian-lessons>

## 최근 미국 내 한국사 관련 역사 왜곡 상황 보도

“Professor’s ‘Comfort-Women’ Lecture Gets Him Indicted—And Sparks Debate on Academic Freedom.” The Wall Street Journal, August 21, 2021.

1. 석춘 무죄 성명' 美교수 "서명 전까지 한글판 성명 못봐" 연합뉴스2021-08-17

2. 어, 日우익 책에 서문..."일본군, 매춘부 납치할 필요없었다" 연합뉴스2021-08-15

“Harvard Professor Accuses Korean-American Scholar of ‘Savage Attacks’ on His Much-Criticized Comfort Women Paper.” Yonhap News. May 13, 2021

(In Japanese:

<https://news.yahoo.co.jp/articles/f555c295886f6cfcf7de93830699101a98d8cf96>)

‘위안부 왜곡 한국사 교재’ 펴낸 미국 출판사, 인쇄 중단 약속 SBS 뉴스  
2021-05-09

‘위안부는 선급금 계약의 일종’…일본 우익 시각 담은 美 한국사 교재 논란  
KBS News 2021-05-03

우익의 입이 된 램지어 … 일본 극우 ‘돈줄’ 이 뒷배 MBC 뉴스 2021-04-6  
일본군 ‘위안부’ 연구에 경종 올린 ‘램지어 쇼크’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21-04-4

이진희 교수 “램지어 논문, 일본의 오랜 역사왜곡 작업의 산물” 연합뉴스  
2021-03-26

유럽 출판사, 램지어 재일교포 펴낸 논문 조사 착수…“심각한 사안” YTN  
2021-02-24

램지어 교수의 조선인 학살 왜곡 논문 막은 재미 역사학자 연합뉴스  
2021-02-22

‘위안부=매춘부’ 하버드대 교수, 간토대지진 왜곡 논문도 발표 한겨레  
2021-02-17

하버드 램지어, 간토 조선인 학살도 부정…“사망자수 따져봐야” 연합뉴스  
2021-02-17





-국제학술회의- 관동대지진 학살사건과 역사수정주의 문제

---

## 최근의 배외주의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리포트

---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센슈대학)



# 최근의 배외주의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리포트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센슈대학)

## 1. 머리말

필자에게 주어진 주제는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배외주의적인 논조에 대해 소개 하라는 것이다. 최근에 정영환(鄭榮桓)씨가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이라는 호칭에 대해 “진재 때 관동지방에서 일어난 조선인·중국인 학살사건이라는 의미에서 ‘관동 대학살’이라는 호칭이 적절하지 않을까.”<sup>1)</sup>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기서는 일본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현재 일본에서 ‘혐오발언’(hate speech)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재일 외국인에 대한 배외적인 언동은 그칠 줄 모른다. 이에 대처하여 2016년 6월 3일 ‘혐오발언 해소법’이 시행되었다.<sup>2)</sup> 벌칙 규정이 수반되지 않은 법률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종래 길거리에서 행해지던 것과 같은 노골적인 배외적 행동은 하기 어려워졌다.

또 도쿄도(東京都)는 2018년 10월 15일 ‘도쿄올림픽’ 개최에 따라 ‘올림픽 현장에 명시된 인권존중의 이념 실현을 지향하는 도쿄도 조례’를 공포했는데, 그 안에 재일 외국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도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3)</sup> 이 조례는 혐오발언을 조사하여 인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017년부터 ‘소요카제’라는 배외주의적 단체가 스미다구(墨田區) 요코아미정(横網町)공원 ‘관동대진재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1973년 건립) 앞에서 매년 개최되는 ‘9·1 조선인 희생자 추모식전’을 방해하는 집회를

1) 鄭榮桓 「在日朝鮮人の形成と「関東大虐殺」(趙景達編 『植民地朝鮮—その現実と解放への道』東京堂出版、2011년、89쪽).

2) 혐오발언 해소법은 법무성 웹사이트에 법조문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https://www.moj.go.jp/JINKEN/jinken04\\_00108.html](https://www.moj.go.jp/JINKEN/jinken04_00108.html))를 참조할 것.

3) “제8조 (도쿄)도는 우리나라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노력의 추진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28년 법률 제68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입각하여 (도쿄)도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적 언동(법률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해소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문에 따름(출전은 도쿄도 웹사이트 ‘도쿄도의 인권시책’).

<https://www.soumu.metro.tokyo.lg.jp/10jinken/sesaku/sonchou/jyourei.html>

열고 있는데(주최자는 관동대지진재의 '위령제'라고 칭하고 있다), 이 집회의 발언이 혐오발언으로 인정되었다.

혐오발언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도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컨대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DHC의 회장은 이전부터 때때로 재일 조선인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발언을 해왔는데, 최근에 매스컴에서 회장이 웹사이트에 쓴 혐오발언을 거론해서 비판이 들끓었다. 지방자치체와 소매상 사이에는 DHC와 계약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sup>4)</sup> 결국 DHC는 웹사이트에서 회장의 발언을 삭제했지만, 공적으로 사죄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나 도쿄도의 대응을 그저 무턱대고 기뻐할 수는 없다. 최근 문제가 되어 있는 기능실습제도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나고야(名古屋)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일어난 스리랑카인 사망사건, 또는 조선학교의 수업료 무상화 배제정책 등 정부와 도쿄도는 위의 법률이나 조례와 모순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1996년의 '국제인권규약의 활용과 개인 구제 신청 제도[個人申立制度]의 실현을 요구하는 선언' 등 수차례에 걸쳐 행정과 사법에 국제인권규약의 이념에 따라 대응하도록 요구해 왔지만<sup>5)</sup>, 도쿄도는 소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올림픽을 초치한 도쿄도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의 주최 하에 개최된 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분출된 데서도 나타난다<sup>6)</sup>(회장을 비롯한 복수의 인물이 성차별 발언으로 사임하거나, 개회식에 참여한 복수의 인물이 과거에 장애인이나 홀로코스트에 관해 배외적인 언동을 한 것이 발각되어 개회 직전에 사임, 해임된 것 등).

이와 같이 현재 일본사회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존중하는 의식과 제도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 중 필자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동대지진재 조선인 학살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DNC 웹사이트에서 재일 코리언 차별문장 삭제, '혐오' 비판 이어지다」(『東京新聞』 2021년 6월 1일, <https://www.tokyo-np.co.jp/article/107879>)

5) 자세한 것은 일본변호사연합회 웹사이트 「인권옹호대회선언·결의집」([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civil\\_liberties.html](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civil_liberties.html))을 참조할 것.

6) 「'결점 투성이' 올림픽. 초치에서 개막까지 10년은 철화와 사임의 연속이었다【회고】」(ハフィントンポスト [The Huffington Post], 2021년 7월 20일, [https://www.huffingtonpost.jp/entry/story\\_jp\\_60ed2981e4b0a771e7fce863](https://www.huffingtonpost.jp/entry/story_jp_60ed2981e4b0a771e7fce863)).

## 2.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외주의 동향과 비판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외주의 동향에 대해 여기서는 관동대진재와 관련된 3개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 (1) '9·1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전'에 대한 공격 - 배외적인 '위령제' 개최

전술한 것처럼 2017년부터 배외적인 주장을 하는 단체 '소요카제'가 '진실한 관동대진재 이시하라정(石原町) 희생자 위령제'라는 집회를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전과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공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전'에서 5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다이쇼(大正) 대진화재 이시하라정 조난자비'(1925년 건립) 근처이다. 이 석비는 요코아미정 공원을 포함한 일대(피복창 터) 공터로 피난했던 이시하라정 주민들 다수가 화재선풍(火災旋風)에 휘말려 죽은 것을 애도하는 추도비이다. 그러나 집회 주최자는 이시하라정 주민의 연고자가 아니며, 이시하라정 정회(町會)에 양해도 받지 않고 집회를 열고 있다.<sup>7)</sup> 또 집회 내용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포함하여 조선인 학살사건의 부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사실로 판단하면 '이시하라정 조난자비'에서 위령제를 거행하는 이유는 단지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전이 열리는 식당 근처이기 때문이다. 이는 배외적인 언동을 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최자는 “우리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6천여 명이나 되는 조선인을 대학살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하고 있다. 또 “불령(不逞) 재일조선인들에게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집이 불탔으며 재물을 빼앗기고 여성들이 강간당한 많은 일본인들”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2019년 집회에서 “범인은 불령조선인, 조선인 코리언이었습니다.” “불령 재일조선인들에게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집이 불탔으며 재물을 빼앗기고 여성들이 강간당한 많은 일본인들”, “그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불령조선인이 아닌 조선인을 보호”라는 발언이 있었다. 혐오발언을 심사하는 도쿄도의 심사회는 이 언동을 “우리나라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라고 인정했다.<sup>8)</sup> 그

7)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 「조선인 희생자 추도 뒤에서 행해진 '학살을 부정하는' 위령제 - 왜 죽은 자는 계속 모독당하는가?」(講談社 『현대신서 사이트』, 2019년 9월 21일,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7331>).

8) 「올림픽 현장에 명시된 인권존중의 이념 실현을 지향하는 도쿄도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입각한

러나 다른 한편 도쿄도는 이런 언동을 목적으로 한 집회나 주최 단체에 구체적인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도 그들의 ‘위령제’ 개최 신청을 허가했다.<sup>9)</sup> 배외적인 언동을 단속하는 데 일본의 행정은 현재도 여전히 소극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언동에 대한 단속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인권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2) 정치적인 압력

2017년 이후 요코아미정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전에 대한 방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고이케(小池) 도쿄도지사가 추도식전에 추도사를 보내지 않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된 계기는 2017년 3월 2일 고가 도시아키(古賀俊昭) 자민당 도의회 의원이 도쿄도의회 본회의에서 했던 질문이다. 고가 의원은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는 서적(구도 미요코(工藤美代子) 『関東大震災 「朝鮮人虐殺」の真実』産経新聞出版, 2009년)에 의거하여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당시의 유언비어가 사실이었다고 하면서, 추도식전에 추도사를 보내지 말 것을 고이케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그에 대해 고이케 도지사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살펴본 후 적절히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판단’의 결과 고이케 도지사는 추도비 건립 이래 역대 도지사가 보내던 추도사를 보내는 것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의회에서 배외주의적인 질문을 하는 일은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다. 2021년 6월 8일, 요코아미정 공원이 있는 스미다구 구의회 정례회에서 자민당의 간다 스나오 구의원이 고가 의원과 마찬가지로 구도(工藤)의 책에 의거하여 조선인 학살의 부정 및 정당화론을 펼치면서 요코아미정 공원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전을 중단시킬 것을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구청장은 “혐오발언으로 의심되는 언동”에 대해, 그것을 기록하여 도쿄도에 신고함과 동시에 법무국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회답했다. 다시 말하면, 간다 의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완곡한 표현으로 간다 의원이 공감을 표하는 배외주의 단체(이 경우에는 ‘소요카제’)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단, 구청장의 발언은 간다 의원의 배외주의적인 주장에 정면으로 반론·부정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의회에서 질문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수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사태가 바뀔 것

표현 활동의 개요 등의 공표에 대하여(도쿄도 총무국 웹사이트, 2020년 8월 3일, <https://www.metro.tokyo.lg.jp/tosei/hodohappyo/press/2020/08/03/12.html?fbclid=IwAR3XTQWJ7aE5KtnvUZvVBkC6aUVcHjczm0wWyk8CXnUR%E2%80%A6>).

9) 소요카제는 2021년 8월 17일자 블로그에서 “‘진실의 비’ 앞에서 ‘진실한 관동대진재 이시하라정 희생자 위령제’를 거행합니다.”(‘이시하라정 조난자비’는 그들에게는 ‘진실의 비’인 모양이다.)라는 타이틀로 위령제 개최를 공표했다(<http://blog.livedoor.jp/soyokaze2009/archives/51933896.html>).

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도 책과 같이 근거 없는 주장도 ‘하나의 설’이라고 인정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sup>10)</sup>

### (3) 미국에서 제기된 배외주의적 주장에 대한 비판

여기서는 소위 ‘램지어 사태’, 혹은 ‘램지어 스캔들’ 등으로 불리는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명과 논평을 소개하고자 한다. 단, 필자는 - 부끄럽지만 -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다. 또 오늘은 이진희(李眞姬)씨가 계시므로, 램지어 논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문제점의 지적, 구미와 한국에서의 논평에 대해서는 당사자로 관여해 오신 이진희씨에게 부탁드리고자 한다.

존 마크 램지어씨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미쓰비시 일본법학 교수(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이다. 일본 정부로부터 2018년 11월 3일부로 육일중수장(旭日中綬章)을 수여받았다.

램지어씨가 쓴 논문 「태평양전쟁에서 성행위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 1월 28일자 산케이신문에 다루어진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다. 이 기사는 한반도 출신의 이른바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임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이 일본과 유럽에 선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역으로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국내외 연구자, 학술단체의 주목을 받아, 많은 비판과 성명이 발표되었다. 특히 많이 목도하는 것은 구미(歐美)의 동아시아론, 경제이론 등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의 비판이다. 또 자타니 사야카(茶谷さやか), 에이미 스탠리, 하나 셰퍼드(Hannah Shepherd), 데이비드 암바라스(David Ambaras), 첼시 시더 등의 검증, 그리고 램지어 논문을 게재한 편집부에 철회를 요구한 「연구 상의 부정을 이유로 「태평양전쟁에서 성행위 계약」 논문의 철회 요구」(2021년 2월 18일 웹페이지에 공개<sup>11)</sup>) 및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한국)·상하이사범대학 중국 ‘위안부’문제연구센터(중국)·아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子どもと教科書全国ネット21](일본)이 주도한 「램지어교

10) 정례회 의사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2021년 8월 22일 현재). 아라카와 하천부지에서 매년 추도행사를 열고 있는 ‘관동대지진 때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여 추도하는 모임’·‘일반사단법인 봉선화(ほうせんか)는 「2021년 6월 8일 간다 스나오 스미다구위원의 정례회 6월 의회 일반 질문에 이의가 있습니다!」(2021년 7월 31일)를 스미다구청장과 자민당에 보냈다. 그것에서는 간다 의원의 발언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스미다구에서 혐오발언이 없도록, 또 9월 1일의 요코야미정 공원이 평온한 추도의 장이 되도록, 그리고 학살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11) <https://sites.google.com/view/concernedhistorians/home?authuser=0>.

수는 ‘인종주의·식민지주의’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2021년 4월 5일<sup>12)</sup>)와 같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공동으로 램지어 논문을 검증·비판하거나 성명을 내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여기서는 일본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성명과 램지어 논문에 대한 비판 중 일본어로 쓰인 비판에 한정하여 다루기로 한다.

램지어 논문이 다루는 주요 대상이 ‘위안부 문제’,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 부락 문제, 해방 후 재일 코리언에 관한 문제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필자가 살펴본 범위 내에서 이들 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논평한 것은 일본에서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본 것 가운데는 자타니 사야카 「램지어 논문은 왜 ‘사건’이 되었나」(『世界』 944. 이와나미서점, 2021년)가, 램지어씨가 이전부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우파가 지켜세워 평가할 때까지 놓친 것을 연구자의 과제로 제시했다.

또 고야마 에미(小山エミ) 「‘램지어 논문 소동’의 배경에 있는 백인지상주의」<sup>13)</sup>라는 논설은, 램지어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시아에서 소수자임을 지적하면서, 그의 논문에 보이는 특징을 1920년 1월에 발표된 「하층계급의 상호 감시 이론」(A Monitoring Theory of the Underclass: With Examples from Outcasts, Koreans, and Okinawans in Japan)에서 발견하고 있다. 고야마씨는 ‘피차별부락·재일 코리언·오키나와’를 ‘하층계급’이라고 부르고, “‘하층계급’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폭력적 혹은 공갈적인 행동을 통해 차별을 불러들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조성금 등 ‘특권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 구도를 그려내면서, 그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라고 지적한다. 또 그가 이런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에 매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주장·사상에 따른 것이며, “그 배후에는 미국의 일본 연구에 전통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백인남성주의·백인지상주의, 그리고 그것에 기회주의적으로 동조하는 일본 우파 언설과의 공범관계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 계급적 차별, 민족 차별, 성차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요구를 ‘등치기’라고 표현한 것, 억압받은 사람들이 키워온 사상과

12) 일본어 성명 페이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OnHyVfkbWUTcJ4oseas\\_TDzC9RCWVezMMCdW-TzZfhSi6cQ/viewform](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OnHyVfkbWUTcJ4oseas_TDzC9RCWVezMMCdW-TzZfhSi6cQ/viewform)를 참조했다.

13) 『주간금요일』 21-14, 2021년 4월 9일호. 그밖에 웹페이지, 「주간금요일 온라인」 2021년 4월 22일, <http://www.kinyobi.co.jp/kinyobinews/2021/04/22/news-87/>에서도 공개. 『주간금요일』 동일 호에는 이미숙(李美淑) 「램지어씨의 ‘위안부=성노예’ 부정 논문, 일본에서는 산케이신문 이외에는 보도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2차 가해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가?」도 게재되어 있는 것 같다(이것은 웹페이지에는 공개되지 않아 필자는 미확인).

운동을 부정, 교육수준이 낮고 범죄자가 많다고 단정하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의 여러 논문의 바닥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사상이며,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구미의 사례는 들지 않는 것도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개별 문제에 대한 성명과 비판 가운데 유료기사와 개인 블로그 등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4)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명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웹사이트 제작위원회,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일본사연구회, 조선사연구회 간사회가 「새롭게 치장하고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을 비판하는 일본의 연구자·액티비스트의 긴급 성명」(Fight for Justice, 최종 경신은 2021년 3월 27일)을 냈다. 15) 또 논설로는 다케우치 간(竹内幹) 「‘위안부는 자발적 계약’이라고 게임이론처럼 주장한 하버드대학 교수의 논문, 게임 이론가들이 맹렬하게 항의」(Yahoo! 뉴스, 2021년 2월 25일) 16), 야마구치 도모미(山口智美)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이 세계에서 ‘큰 비판’을 받는 이유」(현대 비즈니스, 2021년 4월 10일) 17),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램지어 논문의 무엇이 문제인가 -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계약론”을 검증한다」(『世界』 944, 이와나미서점, 2021년)가 나와 있다.

다음으로 소위 ‘부락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아쿠자와 마리코(阿久澤麻理子), 사이토 나오코(齋藤直子) 「램지어 논문 부락연구자가 게재 편집자에게 보내는 서간」(2021년 3월 7일)이 발표되었다. 또 IMADR(부락과 인권 라이브러리)에도 IMADR “Problem of Ramseyer’s Article on Buraku: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Non-Discrimination”(2021년 3월 8일), 부락해방동맹중앙본부 「마크 램지어 논문에 대한 중앙본부 견해」(2021년 3월 15일), 후지오카 미에코(藤岡美恵子)·구마모토 리사(熊本理抄) 「Mark Ramseyer의 논문 “On the Invention of Identity Politics: The Buraku Outcastes in Japan”에 대한 비난 성명」 등을 게재하고 있다.

14) 검색할 때 ‘하버드대학 램지어교수 문제에 관한 링크집 -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https://wam-peace.org/ianfu-topics/8777>)과 같이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램지어 논문이 다룬 오키나와문제와 부락문제에 관한 링크를 함께 링크하고 있는 웹사이트와 신문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 등을 참고했다.

15) 조선사연구회 웹사이트(<http://www.chosenshi.gr.jp/>)의 ‘신착 정보’에 성명으로 링크하는 것이 있다.

16) <https://news.yahoo.co.jp/byline/takeuchikan/20210225-00224442>.

17) <https://gendai.ismedia.jp/articles/-/82049>.

오키나와 미군기지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오키나와 타임즈』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sup>18)</sup>, 그밖에도 ‘일본의 인종주의·식민지주의·섹시즘을 해체하는 더번+20 캠페인 실행위원회’가 램지어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한다. (「기지 반대는 ‘지대(地代) 인상’, 오타(大田) 전 지사는 ‘등치기’ … 미국 교수 논문을 생각하는 세미나 개최」(『琉球新報』 2021년 4월 14일).<sup>19)</sup>

그밖에 해방 후 4·3 사건에 관련된 램지어 논문의 기술에 대해서는 램지어 논문이 잘못 참조한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壯)씨가 「램지어 논문의 제주 4·3에 관련된 중대한 오기에 대하여」(웹페이지 「제주 4·3 73주년 오사카위령제」 2021년 3월 16일)<sup>20)</sup>에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역사문제에 대한 램지어의 언급 중에는, 예컨대 조총련과 그 운동에 대해서도 ‘등치기’라고 하거나, 혹은 일본 야쿠자의 태반이 재일 코리언이라는 등 재일 코리언=반사회적인 집단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일 코리언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이어지는 기술에 대한 비판은 부족한 것 같다.

이러 비판에 대해 램지어씨를 지지하는 측도 그를 옹호하는 기사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논의 대부분은 학문적 절차를 밟아서 한 옹호가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램지어 비판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것뿐으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필자는 느낀다. 앞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학문의 태세를 갖추고 램지어씨를 옹호하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한 논의가 ‘하나의 설’로 인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일단 그런 논의가 ‘하나의 설’로 자리매김 되면, 연구를 발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가 되어 버린다. 실제로 2021년 3월 22일 참의원 문교위원회에서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자민당 참의원의원이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경위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大洋州局) 참사관으로부터 “사독(査讀)을 거쳐 공표된 학술 논문의 철회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와 미국, 일본의 유식자들로부터 학문의 자유라는 견지에서 우려가 표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야마구치 도모미(山口智美)씨는 “아리무라 의원과 참사관 모두 ‘사독’이라는 말

18) 『오키나와 타임즈』에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 ‘기지 반대는 사육’. 후텐마(普天間)는 군(軍)이 구입’, 대학 웹에 논문, 우려의 목소리」(2021년 2월 28일 (<https://www.okinawatimes.co.jp/articles/-/714039>), 「사설 [미국교수 오키나와 비판 논문] 차별 의식과 단정」(동년 3월 1일, <https://www.okinawatimes.co.jp/articles/-/714346>), 그밖에 몇 가지 기사가 있다.

19) <https://ryukyushimpo.jp/news/entry-1304612.html>.

20) <https://43osaka.hatenablog.com/entry/2021/03/16/231757>.

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철회를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참사관의 말에서부터도 정부가 램지어 논문을 평가”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대신이 “한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은 다른 연구자의 다른 연구 성과에 의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의가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회답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sup>21)</sup> 이런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 3.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과 램지어 논문의 문제점

「민영화하는 경찰 : 일본의 경찰, 조선인 학살, 그리고 경비사회」(Privatizing Police: Japanese Police, the Korean Massacre and Private Security Firms, 2019년 6월)를 비롯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서술에도 램지어씨의 동일한 ‘수법’이 그대로 보인다. 그는 도일한 조선인들을 범죄자라고 단정하고, 죽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종종 보이는 학살부정론, 학살의 정당화를 모방한 것으로, 실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가토 나오키(加藤直樹)씨가 아사히신문사 언론 사이트 『논좌』(2021년 7월 5일, 7일, 9일, 12일, 14일)에 5차례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가토씨는 램지어 논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조선인 테러(유언비어)는 사실이며, 자경단의 조선인 학살은 정당방위(학살부정론)
2. 자신의 논지와 상반된 선행 연구의 무시
3. 연구와 사료 취급의 불철저함, 자의성
4. 전거로 삼는 참고문헌 중에 학술논문 이외의 문헌이 포함되어 있다
5. 추론에 의해 ‘사실’로 판단하는 수법(유언비어와 조선인 사망자 수에 대해)
6. 군대가 행한 학살사건에 언급하지 않음
7. 당시 관헌과 자경단이 가한 가해에 대해 언급한 증언을 무시

여기서 가토씨의 논의를 상세하게 소개할 여유는 없지만, 5에 대한 가토씨의 지

21) 야마구치 도모미 전개 논문

적만 소개하고자 한다. 램지어 논문에는 조선인의 테러 등 중대한 범죄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거1 : 진재 이전에 조선인은 범죄와 테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재 때도 했을 터이다.

근거2 : 진재 때의 신문기사가 조선인의 범죄를 전하고 있다

근거3 : 일본 정부가 조선인의 약탈, 방화, 강간, 우물에 독약 투입을 인정하고 있다.

근거4 : 경찰은 진재로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서 빠진 조선인 범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금세 알 수 있듯이 ‘근거3’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램지어씨의 독선적인 추론에 불과하며, ‘진재 때 조선인 범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근거3’은 10월 20일에 사법성이 공표한 ‘조선인 범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며(진재 때 조선인의 테러를 인정한 판결은 없으며, 피해자도 없다), 조선인 학살사건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이었음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또 하나의 램지어 논문 비판을 소개하고자 한다.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이라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회보』(29, 2012년 8월)에도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정리(필자[다나카]가 집필, 본 장 부분과 동일한 비판을 간략화한 것)와 니시자키 마사오(西崎雅夫) 「램지어 논문에 인용된 관동대진재 조선인 관련 보도기사의 신빙성을 검토한다」를 게재했다. 마지막으로 니시자키씨의 논고를 소개한다.

니시자키씨는 램지어 논문에 사용되고 있는 신문기사의 해당 기사를 제시하고, 아울러 공문서와 민간인의 증언을 대조하여 램지어씨의 평가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니시자키씨는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기록은 전문에 불과하며, 기사 내용이 바로 조선인 학살사건이라는 점, 신문기사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점, 다른 기록과 대조해 보면 실제로 조선인 폭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검증했다. 그리고 신문의 유언비어 보도는 중앙신문에서는 9월 4일 이후 사라져 가는 점, 한편 지방신문의 기사에서 유언비어의 보도가 사라지는 것은 조금 늦은 점(시간차가 있다) 등을 지적했다.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때 어느 신문을 사용할지, 어느 시기의 기사인

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은 램지어씨의 실증이 가진 방법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 4. 맺음말

이상과 같은 램지어 논문에 대한 비판으로 다음과 같은 논점을 들 수 있겠다.

램지어씨의 입장은 늘 권력이나 다수자 편에 있으며, 피해자를 교육 수준이 낮다, 범죄자가 많다, 등치는 사람 등으로 자리매김 하여 공격한다. 그는 그 근거로 종종 일본의 배외주의자의 서술을 인용한다. 이들 서술을 무비판적으로 논거로 삼는 것은 학문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서술을 집필한 배외주의자나 그것을 원조하는 한·일·미의 정치세력에게 하버드대학의 교수가 보증했다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에 합치되는 서술이나 이론은 이것저것 이용하는 한편,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연구나 사료는 무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은 그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램지어 논문에 대한 필자의 인식을 추가하기로 한다.

필자가 본 램지어 논문은 모두 방대한 참고논문의 열거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램지어씨가 어떻게 이해하고, 논문의 어디에 이용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즉, 추가 거의 없다) 것이 램지어 논문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증 방법이 결여된 이러한 연구가 하버드대학 연구자의 논문으로 학술잡지에 게재됨으로써 배외적인 주장에 권위를 부여하는 구조가 보인다.

문제는 램지어씨에 그치지 않는다. 심사위원이 아무리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램지어 논문에 보이는 배외적인 내용은, 그것이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 ‘학문적 윤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간파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램지어 논문은 심사를 통과해 버렸다. 복수의 논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램지어 논문이 동아시아가 아니라 구미사회의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 계급에 대해 똑같은 주장을 했더라면 논문은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시아에 대해서라면 배외적인 주장을 해도 허용된다는 램지어씨의 사상과, 그것을 통과시킨 논문 심사위원의 사상은 상통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한편, 자계(自戒)를 포함하여 말하지만, 일부 연구자 이외의 일본 연구자나 일본 매스컴은 램지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추도식전 옆에서 그것을 공격하는 집회가 열리거나, 혹은 의회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조선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조잡한 질문이 나오고, 그것이 문책도 받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현재 상황이다. 그만큼 가토씨와 니시자키씨의 비판은 소중하다.

지금까지 기술한 '9·1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전'에 대한 공격, 도쿄도의회 의원·스미다구의회 의원의 발언, 램지어 논문 등 세 개의 배외주의적인 논조는 모두 가토씨가 지적하는 '학살부정론'에 의거하고 있다. 그것은 '6천 명'이라는 학살자 수가 과대하다(과장이다)는 비난, 그리고 '조선인 폭동'의 유언비어는 사실이라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논의이다. 모두가 실증이 결여된 추측 혹은 '희망'에 불과한데('추론'조차 아니다), 조선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싶기 때문에 나온 조잡한 부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비판을 해도 거듭 나오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연구자의 입장은 이상과 같은 배외적인 논조의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학살부정론'에 대해 연구자가 어떤 시각을 제시해야 할 것인지가 요구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것에 관련된 것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 보고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국가권력이 학살에 관여한 것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필자는 조선인 학살의 정당화·부정론의 특징이, 국가권력이 유언비어의 발생, 그리고 조선인 학살을 비롯한 중국인과 일본인 학살에 주체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비판할 때는 단순히 그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학살이 국가권력의 관여 없이 일어날 수 없었던 점, 즉 학살을 만들어낸 구조에 대해 지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들의 논의가 자신의 논지에 유리한 사료를 이것저것 이용한 것에 불과한 데서 생기는 방법론적 문제를 비판하고, 그를 대체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들의 논의를 들어도 지진의 발생부터 유언비어, 학살에 이르는 과정은 전혀 알 수 없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 과정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 같은 사료를 이것저것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동대진재의 희생자를 추도한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것은 전술한 위령제에서 이시하라정 희생자에 대한 추도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명백하다.

따라서 그들의 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학살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 제시한다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일본 관민은

왜 학살을 일으켰나?’라는 가장 커다란 의문에 대한 회답은 그들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제시할 수 없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의 하나는 사료의 결여이다. 종래 역사연구자들의 연구는 대부분이 공문서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한편, 지방의 진상규명 활동에서는 학살 현장 주변 주민에 대한 청취 등 목격자, 가해자, 체험자의 증언과 회상이 집적되어 왔다. 이 ‘분단’의 이유를 여기서 설명할 여유는 없지만, 사료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의 연구는 공문서와 증언의 쌍방을 구사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자에 간행된 니시자키 마사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기록 - 도쿄 지구별 1,100의 증언』(현대서관, 2016년)은 주민 등의 증언을 모은 것인데, 공문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 지역의 학살 목격증언, 그리고 관헌과 학살의 관여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시험 삼아 강덕상·금병동 편 『현대사사료』(미스즈서방, 1963년)과 마쓰오 쇼이치(松尾章一) 편 『관동대지진 정부 육해군 관계 사료』(I~III, 일본경제평론사, 1997년) 등 몇몇 사료집에 수록된 공문서에 기록된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학살·상해 사건에 관한 기록 건수와 니시자키씨의 증언집의 건수를 비교하면, 전자는 168건인 데 비해, 후자는 574건에 이른다. 또 살상사건 기술 내용도 후자가 훨씬 구체적이다.<sup>22)</sup> 이러한 사료를 이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조선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자 한다.

22) 구체적인 분석은 별고를 준비하고 있다(『専修大学人文科学研究所月報』2021년 9월호 및 이토 슌스케(伊藤俊介)·오가와라 히로유키(小川原宏幸)·신창우(愼蒼宇) 편 『(가제) 아래로부터의 역사학』有志舎, 2022년 간행 예정).





-국제학술회의- 관동대지진 학살사건과 역사수정주의 문제

---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내 연구와 일본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동향

---

성 주 현(1923제노사이드연구소)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내 연구와 일본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동향

성 주 현(1923제노사이드연구소)

## 1. 머리말

2023년 9월 1일은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을 맞는 날이다. ‘1백 년’이 갖는 의미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오랜 시간의 기억보다는 역사의 진실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의미 역시 새롭게 조명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백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면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줄을 잇고, 재해석을 통해 의미가 되새긴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백주년을 맞는 해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념단체, 종교 등에서 무수한 기념행사와 학술회의 등을 통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을 기억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1백 년’은 시간적 의미보다는 역사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 3년 후면 관동대지진 1백 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과연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조명해야 하는 지 과제를 안고 있다.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sup>1)</sup>은 1923년 9월 1일 12시경 일본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일어난 당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190만 명의 피해자, 그리고 10만 5천여 명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대재앙이었다.<sup>2)</sup>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의 하나였다. 관동대지진으로 일본 내에서는 적지 않은 민심이 동요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데모크라시가 성숙해가는 시기에 일본의 정치 상황도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 파시즘 사상이 대두되는 조짐이 나타나

---

1)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關東) 일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일본에서는 ‘간토대진재(關東大震災)’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는 국내의 일반적인 표현인 관동대지진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2)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일본 관동지역의 1부(府), 6현(県)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99,331명이 사망하였고, 전 가옥이 파괴된 가옥은 128,266호, 반 파괴된 가옥은 126,233호, 소실된 가옥 수는 447,128호에 달하였다.

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즉 관동대지진이 발생함과 거의 동시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를 계기로 군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인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sup>3)</sup> 조선인에 대해 ‘불령선인(不逞鮮人)’<sup>4)</sup>이라는 유언비어가 경시청 뼈라에 의해 유포되어 조선인이 학살되었다.<sup>5)</sup>

이러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 하버드대 로스쿨의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의 성노예를 부정하는 논문을 발표해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램지어는 최근까지 ‘위안부’ 부정과 함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제주 4.3과 재일조선인, 일본 내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드러낸 논문을 발표해왔다. 이는 일본 역사수정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관동대지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램지어 관동대지진 역사부정 논문에 대한 국내의 동향과 연구 동향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 2.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일본에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오랫동안 연구한 아마다 쇼지에 의하면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은 1923년 9월 1일부터 6일 걸쳐 관동지방의 제 지역에서 군대, 경찰, 자경단에 의해 저질러졌다”<sup>6)</sup>라고 밝힌 바 있다. 아마다 쇼지에 의

3) 동북아역사재단,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 2013, 35쪽.

4) ‘불령선인’은 제국일본이 일제강점기 식민지통치에 반대하는 조선인을 불온하고 불량한 인물로 지칭한 용어이다. 일본어로는 ‘후테이센진(不逞鮮人)’이라고 하였는데, ‘후테이(不逞)’는 멋대로 행동함, 도의에 따르지 않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센진(鮮人)’이란 용어는 조선인을 의미하는 조선진의 약어로서 경멸적인 차별용어로 사용되었다. 한편 제국일본은 독립운동을 비롯해 일제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불령선인이라 칭했으며,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철저한 감시와 관리 아래 생활해야 했다. 특히 1923년 관동대지진 때에는 당시 불령선인들이 날뛰고 우물에 독약을 타서 일본인을 살해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수백 명의 중국인과 함께 수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다.

5)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강덕상, 「1923년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 대학살 진상」, 『역사비평』 45, 역사문제연구소, 1998; 강덕상,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일본 측의 ‘3대 테러사건’ 사관의 오류-」, 『역사비평』 47, 역사문제연구소, 1999; 아마다 쇼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2008; 강덕상·아마다 쇼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2013 등이 대표적이다.

하면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당일 즉 9월 1일 조선인은 학살되었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당일 조선인 학살이 시작되어 6일 동안 학살된 조선인이 6천여 명에 달하였다.<sup>7)</sup>

이와 같은 조선인 학살이 국내에 전해진 것은 일본에 유학 중인 한승인과 이주성이 귀국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지만<sup>8)</sup>,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10월이었다. 이는 일본에서 자경단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선인 학살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당시 신문들은 '○○○학살사건'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sup>9)</sup>

이와 같이 조선인 학살이 알려졌지만 일제강점기에는 관련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일제강점기는 연구의 제약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 조선인학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방 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연구 역시 크게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해방 직후는 해방의 기쁨으로 조선인학살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였지만, 이듬해 1946년에는 국내외에서 여러 단체에서 조선인학살 추모행사를 준비하였다.<sup>10)</sup> 9월 1일에는 기독교청년회에서 추모행사를 가졌으며,<sup>11)</sup>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다.<sup>12)</sup> 이후 추모행사가 이어지기도 하였지만 연구로 이어지는 못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는 일본학계에서 관심을 가졌다. 첫 연구의 시도는 해방

6) 야마다 쇼지, 「일본 민중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날 일본의 정치적·사상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 동북아역사재단, 2013, 45쪽.

7)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수는 기록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동안 일반화된 『독립신문』(상해판) 1923년 12월 1일자에 따른다.

이에 비해 『독립신문』(상해판) 1923년 12월 26일자에 의하면 “敵地 震災 時 敵에게 虐殺된 同胞의 수에 對하여 자못 그 的確한 數字를 알기 어렵다가 本社 特派員의 調査한 바에 依하여 6千 6百餘 名으로 알게 되었던 바, 德國 博士가 發表한 바에 의하면 橫濱에서만 1萬 5千名의 虐殺이 있었다 한즉 本社 特派員이 調査한 바는 橫濱의 分이 包含되지 아니한 모양이니,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報道되는 바를 綜合하면 2萬餘 名이라는 可驚할 多數로 算定되다.”라고 하였다.

8) 한승인과 이주성은 귀환 도중 “자경단이 조선 사람인 줄을 알면 끌어내리게 되었으므로 매우 위험하였다”라고 하였으며 관련 기사 중 5행이 삭제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말을 하고자 하였으나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고 하였는데, 이는 귀환 도중 조선인 학살을 목도하거나 알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동아일보』 1923년 9월 7일 및 『조선일보』 1923년 9월 7일)

9) 『동아일보』 1923년 10월 22일.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횡빈시(橫濱市) 중촌정 굴할청년회(中村町 堀割靑年會) 회원 모가 13일 ○○○사건에 관하여 소관수(壽)경찰서에 자수하였으므로 즉시 횡빈지방재판소의 판검사가 출장하여 심문을 한 결과 다수한 연루자가 있는 모양임으로 즉시 신내천현 경찰부에서는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현병대도 또한 시내 각처에 있는 자경단과 청년단을 엄밀 조사 중인데, 조사의 진행을 쫓아 이번 ○○○학살사건에는 다만 청년회원뿐만 아니라 경찰관 중에서도 참성한 사람이 있는 모양인 듯하여 각 경찰 당국자는 불안 중에 날을 보낸다더라.”

10) 『현대일보』 1946년 8월 14일.

11) 『현대일보』 1946년 9월 1일 및 9월 2일.

12) 『한성일보』 1946년 9월 1일; 『동아일보』 1946년 9월 3일.

직후인 1947년으로 재일조선인 단체에서 의해 진행되었는데, 김병직이 편저한 『관동진재 백색테러의 진상』이다.<sup>13)</sup> 이후 한동안 부진한 연구는 195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58년 사이토 히데오(齊藤秀夫)는 “조선인 소란(소요, 朝鮮人さわぎ)”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관련 연구물을 발표하였으며,<sup>14)</sup> 이에 대해 재일사학자 강재연은 ‘조선인 박해’라는 명칭으로 반론을 한 바 있다.<sup>15)</sup>

이러한 선형적 연구를 이어 관동대지진 40주년을 맞는 1963년부터 조선인 학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자는 강덕상, 금병동, 이진규 등이다.<sup>16)</sup> 이를 계기도 야마다 쇼지,<sup>17)</sup> 다나카 마사다카<sup>18)</sup> 등 일본인 연구자들도 조선인학살 관련 연구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의 조선인학살과 관련 연구는 일본학계보다는 늦었지만 1980년대부터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는 일본 연구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초기의 연구는 신재홍에 의해 진행되었으며,<sup>19)</sup> 이후 국내외 연구자들<sup>20)</sup>과 일본지역 연구자들이 부분적으로 일본 내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sup>21)</sup> 우선 식민지 조선의 반응은 성주현과 김강산에 의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진 바 있

13) 金秉稷 編著, 『関東震災白色テロルの真相』, 朝鮮民主文化団体総連盟, 1947.

14) 齊藤秀夫, 「関東大震災と朝鮮人さわぎ」, 『歴史評論』 99, 1958.11

15) 姜在彦, 「関東大震災と朝鮮人迫害」, 『朝鮮問題研究』 4, 1960.9.

16) 李珍珪 編, 『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真相と實態(朝鮮に関する研究資料)』, 朝鮮史料編纂會, 1963; 姜徳相 琴秉洞 編, 『関東大震災と朝鮮人(現代史資料6)』, みずず書房, 1963; 姜徳相, 「つくりだされた流言-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について」, 『歴史評論』 157, 歴史科學協會, 1963; 姜徳相, 「大震災下の朝鮮人被害者數の調査」, 『労働運動史研究』 37, 關西大學文學部有坂研究室, 1963; 姜徳相, 「関東大震災に於ける朝鮮人虐殺の實態-特に40周年を記念して-」, 『歴史研究』 278, 歴史研究會, 1963.

17)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朝鮮人暴動流言をめぐる地方新聞と民衆-中間報告として-」, 『在日朝鮮人史研究』 5,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1979; 山田昭次 著, 이진희 역,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2008 외 다수의 연구가 있다.

18) 田中正敬, 「関東大震災はいかに伝えられたか」, 『歴史地理教育』 657, 2003. 8;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간토(関東)대지진과 지바(千葉)에서의 조선인 학살의 추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외 다수의 연구가 있다.

19) 신재홍, 「관동대지진과 한국인 대학살」, 『사학연구』 38, 한국사학회, 1984.

20) 이진희, 「관동대지진을 추도함 : 일본제국의 ‘불령선인’과 추도의 정치학」, 『아세아연구』 13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박경하, 「1930년대 한 조선 청년의 구직 및 일상생활에 대한 일고찰-‘뽕判録日記’(1918~1947)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등이 있다.

21) 이연, 「관동대지진과 언론통제 - 조선인 학살사건과 보도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7, 한국언론학회, 1992; 김인덕, 「재일운동사 속의 1923년 조선인 학살」, 『순국』 32,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1993; 노주은,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 총독부의 ‘震災處理’ 과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2, 한일민족문제학회, 2007; 노주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성과와 과제 : 관동대지진 85주년에 즈음하여」, 『학림』 29,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2008; 이형식, 「중간내각 시대(1922.6-1924.7)의 조선총독부」, 『동양사학연구』 113, 동양사학회, 2010; 김인덕, 「재일조선인과 관동대지진에 대한 연구 및 서술 경향」, 『한일역사쟁점논집-일본 역사교과서 대응 논리-』, 동

으며,<sup>22)</sup> 국외에서의 반응으로는 홍선표와 김인덕의 연구가 있다. 홍선표는 미국의 한인 단체와 독일 한인 유학생의 활동을, 김인덕은 일본에서의 다양한 세력을 중점적으로 추적하였다.<sup>23)</sup> 이외에도 관동대지진 이후 제국일본의 조선인 대책에 대한 연구도 있다.<sup>24)</sup> 아울러 일본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상당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sup>25)</sup>

그 연장선에서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연구성과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최근 5년간(2016~2021)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연구 성과<sup>26)</sup>

연도	연구자	연구 주제	비고
2016	조항미	「‘기억’을 기억하기 위하여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현장(지바 현) 필드워크」, 『한일교육연구』 12, 한일합동교육연구회	
2017	이미경	「관동대지진 직후 조선인에 대한 표현양상 : 9월부터 11월까지 기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72, 한국	

북아역사재단, 2010; 노주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공백’-관동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 연구-」, 『역사비평』 104, 역사비평사, 2013; 강덕상 외 지음,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2013 등이 있다.

- 22) 장세윤,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사림』 46, 2013. 8; 성주현, 「식민지 조선에서 관동대지진의 기억과 전승」, 『동북아역사논총』 48, 동북아역사재단, 2015;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편, 「관동대지진 직후 재일조선인 정책: 식민지 조선 언론을 중심으로」, 『재일코리아에 대한 인식과 담론』, 선인, 2018 등이 있다.
- 23) 홍선표, 「관동대지진 때 한인학살에 대한 歐美 한인세력의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43, 동북아역사재단, 2014; 김인덕,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일본 내 운동세력의 동향 - 1920년대 재일조선인 운동세력과 일본 사회운동세력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49, 동북아역사재단, 2015.
- 24) 조경희, 「관동대지진 전후 제국일본의 조선인 대책과 사회사업 사상-‘내선융화’ 사업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28, 대구사학회, 2017.
- 25) 김지연, 「『도쿄재난화신』 속의 일본, 일본인 그리고 조선」, 『일본학보』 108, 한국일본학회, 2016; 양동국, 「다케히사 유메지와 한국-사상성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39,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이지형,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 ‘살인을 저질렀지만’(人を殺したが)의 풍경- 살인의 추억 그리고 관동대지진」, 『일본문화연구』 10, 한국일본문화학회, 2004; 이지형, 「관동대지진과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13, 한국일본문화학회, 2005; 성해준, 「日帝期 한국 신문을 통해 본 大杉榮」, 『일본문화연구』 24, 한국일본문화학회, 2007; 조경숙,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와 관동대지진」, 『일본학보』 77, 한국일본학회, 2008; 김흥식, 「관동대지진과 한국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9, 한국현대문학학회, 2009; 김지연, 「다케히사 유메지와 관동대지진 그리고 조선 - 회화와 사상성」, 『아시아문화연구』 21,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 「계엄령에 대하여 -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일본비평』 7, 서울대 일본연구소, 2012; 황호덕, 「재난과 이웃, 관동대지진에서 후쿠시마까지 - 식민지와 수용소, 김동환의 서사시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을 단서로」, 『일본비평』 7, 서울대 일본연구소, 2012 등이 있다.
- 26) <표>의 연구성과는 국사편찬위원회, 국가전자도서관,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서 ‘관동대지진’, ‘간토대지진’으로 검색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6	
	조경희	「관동대지진 전후 제국일본의 조선인 대책과 사회사업 사상 : '내선융화' 사업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28, 대구사학회, 2017.8	
	엄인경	「日本の災難詩歌に関する研究 : 関東大震災における震災詠の類型分析を中心に」, 『일본언어문화』 41,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7.12	
	김광렬	「21세기 일본의 '헤이트스피치'와 1923년 관동대지진 시 한인 학살범의 논리 고찰」, 『한일민족문제연구』 33, 한일민족문제학회, 2017.12	
	다 나 카 마사다카	「일본 내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사건 진상 규명 운동의 현황」, 『한일민족문제연구』 33, 한일민족문제학회, 2017.12	
	김인덕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사건이 재일한인 사회에 주는 현재적 의미 : 민단과 총련의 주요 역사교재와『민단신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33, 한일민족문제학회, 2017.12	
	김강산	「관동대학살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과 대응 - 사건 이후 조선에서 결성된 단체를 중심으로 -」, 『사림』 60, 수선사학회	
2018	강효숙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의미 : 민족, 제노사이드」, 『전북사학』 52, 전북사학회, 2018.3	
	오혜진	「관동대지진 이후 조선 지식인들의 일본에서의 삶 : 유진오의「귀향」과 염상섭의「숙박기」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58, 우리문학회, 2018.4	
	노윤선	「일본지진을 통해 바라본 혐한(Anti-Korea(n) Sentiment)과 혐오 발언(Hate Speech)에 대한 고찰 : 관동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60, 한국일본근대학회, 2018.5	
	이상복	「관동대지진과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 : 히라바야시 다이코의「숲 속」을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42,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8.6	
	주혜정	「다큐멘터리 영화와 트라우마 치유 : 오충공 감독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35, 한일민족문제학회, 2018.12	
2019	조미경	「1923년 간토(関東)대지진과 조선인학살 사건을 둘러싼 일본문학자의 인식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65, 한국일본근대학회, 2019.8	
2020	배영미	「1920년대 두 번의 조선인학살 : '나카츠카와 사건, 기모토 사건'의 실태와 관동대지진 때 학살과의	

		비교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62, 한일관계사학회, 2020.2	
	성주현	『관동대지진과 식민지 조선』, 도서출판 선인, 2020.4	단행본
	김도형	「관동대지진 한국인 피살자 명부 자료의 분석」, 『복약사학』 12, 복약사학회, 2020.7	
	강경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전후 ‘불령선인’을 둘러싼 언설과 시책」, 『日本文化學報』 86, 韓國日本文化學會, 2020.8	
2021	조경희	「마크 램지어의 역사부정과 소수자 혐오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재일조선인, 부라쿠민 서술 비판-」, 『여성과 역사』 34, 한국여성사학회 2021.6	
	신채원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사건의 기억과 수용 : 오충공 작품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21	석사학위 논문
	김여진	「간도대지진을 제재로 한 한일 문인의 시가 비교연구-‘죽음’과 ‘삶’을 키워드로-」, 『일어일문학』 89, 대한일어일문학회	

<표>에 의하면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연구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편, 2017년 7편, 2018년 5편, 2019년 1편, 2020년 4편, 2021년 3편으로 21편 정도이다. 이는 적지 않은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주제로 보면 역사 10편, 문학 6편, 사회학 2편, 다큐 2편, 교육 1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전히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과 관련된 규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오충공 감독의 다큐에 대한 연구가 2편으로 영상과 관련된 연구와 문학과 관련된 주제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술연구는 아니지만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동화가 최근 두 권이 간행되었다는 것도 새로운 접근이 아닌가 한다.<sup>27)</sup> 다큐와 관련된 영상물은 간도대지진 조선인학살이 있었던 매년 9월 1일을 전후하여 방송사에서 일회성 내지 단발성으로 방영되고 있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책의 출판은 신선한 의미를 준다.

27) 박지숙, 『괴물들의 거리』(풀빛 동화의 아이들 32), 풀빛, 2019; 김종수, 『옛장수 구학영』, 기억의 서가, 2021.

### 3. 램지어 논문과 일본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국내의 동향

2020년 12월 이후 하버드대 로스쿨의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를 둘러싼 역사논쟁이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램지어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의 성노예 피해를 부정하는 논문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의 연구자와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논문 철회를 주장하는 등 비판과 반발을 가져왔다.<sup>2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익 언론과 연구자들은 램지어의 연구 성과를 적극 지지하였으며, 국내 일부 연구자들도 그의 견해를 옹호하였다.<sup>29)</sup>

이러한 사태에서 램지어의 기존 연구에 의하면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부정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는 2019년 6월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학살 그리고 사설보안업체들(PRIVATIZING POLICE : JAPANESE POLICE, THE KOREAN MASSACRE, AND PRIVATE SECURITY FIRMS)”을 발표하였는데, 이 글은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역사왜곡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램지어의 논문이 알려진 것은 『한겨레』의 보도였다. 기사의 내용이 좀 길지만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라고 주장한 논문을 써 물의를 빚은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왜곡한 논문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램지어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학살과 사립 보안업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사적인 치안 수단을 찾는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예로 들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조선인의 범죄에 대한 일본인들의 정당방위였다’ 는 일본 우익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1923년 9월1일 간토대지진

28) 『중앙일보』 2021년 3월 24일.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도 비판적이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Fight for Justice)’는 3월 14일 램지어의 위안부 논문을 비판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일본사연구회,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일본 내 학술단체들이 참여했다. 위안부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명예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계약에 대해 논하면서도 계약서를 한 점도 제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노자와 아카네 릿쿄대 교수는 “램지어의 논문은 사료적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어 학술논문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창기와 위안부 제도의 실태를 논하고 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전문연구자로 알려진 가토 나오키(加藤直樹)는 朝日新聞社 언론 사이트 『論座』라는 코너에 「ラムザイヤー教授の「朝鮮人虐殺」論文7つの問題点」이란 글을 2021년 7월 5일부터 14일까지 5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29)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끌려간, 강제 연행된 사람인데 무슨 계약이 있었다는 거냐고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직접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조선인 강제 연행은 없었고,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램지어 교수를 두둔하였다.(『경향신문』 1921년 4월 24일)

이 발생한 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같은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본 자경단과 경찰이 조선인 수천명을 학살한 것이 정설이다.

램지어는 ‘조선인 폭도가 집에 불을 지르며 요코하마에서 도쿄로 올라오고 있다’ 같은 당시 일본 신문 기사를 인용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런 기사들을 학술적으로 진지하게 조선인 폭동의 증거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지진 직후 극도의 혼란기에 일본 신문들이 대거 오보를 쏟아 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지진 3년 뒤인 1926년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 폭동’에 관한 것을 포함해 각종 오보 예를 제시했을 정도다.

램지어는 조선인들이 일부 강도와 절도,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는 1923년 일본 사법성 발표도 인용하며 “숫자는 적지만 당시 경찰 인력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 보라”고 적었다. 그러나 램지어가 인용한 사법성 발표는 신원 불상 조선인 가해자와 신원 불상 일본인 피해자가 다수 등장하는 식이어서, 발표 당시부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일본 경찰이 자경단의 범죄를 묵인하거나 가담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술은 논문에 나오지도 않는다. 램지어는 19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일본 거주 조선인 중 다수가 남성이고 젊었다며 “젊은 남성은 어디에서든 범죄율이 높은 집단이었다”고 적어, 당시 일본 거주 조선인을 범죄 예비군 취급하기도 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우파 성향 일본인들도 오랫동안 부정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사회 우경화 강화 경향에 따라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부정하는 이들과 싸워나가고 있다.

램지어가 쓴 이 논문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으며, 오는 8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출간할 예정이다. 미국 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학교 사학과 이진희 교수는 케임브리지대에 항의문을 보내 “이런 엉터리 역사 왜곡 논문을 경제 연구나 법제 연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하버드 교수의 명의를 내세워 미국뿐 아니라 세계 유명 학술 출판사가 게재하는 일이 없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sup>30)</sup>

해당 논문은 2021년 8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출간된 ‘민영화’를 주제로 한 학술지(핸드북)에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전부 수정되었다. 히브루대 로스쿨 교수이자 케임브리지대 학술지 공동편집장인 앨랜 해럴 교수는 “간토 조선인 학살 왜곡한 램지어 논문 상당히 수정하기로 했으며,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매우 유감스러운 실수’라고 인정하였다.<sup>31)</sup>

램지어 논문 수정 배경에는 재미사학자 이진희 교수의 항의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조선인 학살을 왜곡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의 논문 수정에 나서게 된 배경엔 재미 역사학자 이진희 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 사학과 교수의 끈질긴 노력이 있

30) 『한겨레』 2021년 2월 17일.

31) 『연합뉴스』 2021년 2월 21일. 또한 해럴 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SSRN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했으며, 반년 뒤 인쇄하는 핸드북에 ‘원문 그대로 실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었다.<sup>32)</sup>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는 램지어 논문이 국내에 알려지자 천도교계에서 가장 먼저 2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천도교청년회 등 관련 단체와 교인은 “학자로서 학문의 양심을 버린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며 역사왜곡 논문에 대한 공식 사과와 논문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램지어 교수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등을 요구하였다.<sup>33)</sup>

관련 시민단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를 비롯하여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 천도교청년회 등에서 램지어 논문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sup>34)</sup> 시민연대를 이끄는 김종수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대표는 “이 논문은 군관민이 총체적으로 조선인을 학살한 범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유언비어를 사실화했던 일본 정부의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sup>35)</sup>

또한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규명하는 1923 제노사이드 연구소는 “램지어 교수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한 논문처럼 증거가 박약하고, 또 일본 우익을 대변하는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가 발표한 일련의 논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sup>36)</sup> 뒤이어 한중일 39개 시민단체에서 램지어 논문 철회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sup>37)</sup> 이들 단체는 “램지어 사태에는 학문의 자유를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잠재해 있다”며 “일본이 근대국가, 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지배,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저지른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인권 유린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이라고

32) 『연합뉴스』 2021년 2월 22일.

33) 이날 성명서에 연대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천도교청년회, 천도교여성회, 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한울연대, 천도교청년회대학생단, 천도교미술인회, 천도교연합합창단, 천도교종학대학원, 천도교도서관, 동학혁명기념관, 경기3·1운동기념사업회, 경기동학혁명기념사업회, 동학정신선양단, 인내천운동연합, 신인간사, 개벽하는사람들,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동학단체협의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34) 성명서는 ‘우리의 주장’이라는 다음의 3개 항을 촉구하였다.

“- 램지어는 독성 강한 쓰레기 논문을 즉각 폐기하라- 일본정부는 간토 학살사건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문재인 정부는 간토 학살피해자 추도식을 국가 차원으로 개최하라.

- 21대 국회는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35) 『연합뉴스』 2021년 2월 24일.

36)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이들 단체와 함께 램지어 교수의 또 다른 중대한 역사 왜곡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1923년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후 조선인들을 학살한 이른바 ‘관동대학살’ 사건을 두고 이것이 조선인의 범죄 때문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명했다.(『대한뉴스』 2021년 2월 25일.

37) 『디지털 타임스』 2021년 4월 5일; 『mbc뉴스』 2021년 4월 5일.

주장하였다.

램지어 논문에 대한 대응은 연구자의 언론 인터뷰와 학술대회로 이어졌다. KBS 공동 연구에 참여한 성공회대 조경희 교수는 "램지어는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조선인 범죄에 대한 일본인의 보복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자경단의 만행은 물론 공권력과 언론 또한 조선인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던 점이 그동안 많이 밝혀져 왔다. 램지어 교수의 글은 선행연구의 축적을 무시하고 당시 유언비어를 21세기에 재생산해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38)</sup>

3월 26일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진희 이스턴 일리노이주립대 사학과 교수는 기조 발표를 통해 "2015년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해외 불신을 없애기 위해 대외홍보용 예산을 대폭 강화해왔다"며 "최근 램지어와 같은 학자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역사 왜곡 논문들은 이런 전략적 지원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적극적 공공외교로 방향을 전환해 미국의 정계와 학계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미국 학계에서 이런 형태의 역사 왜곡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구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서 니시자키 마사오는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의 실태(關東大地震時の朝鮮人虐殺の實態)」라는 발표에서 관동대지진이 과거지사가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시민운동가를 겸하는 그는 관동대지진과 관련한 극우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위험성을 알렸다.<sup>39)</sup>

램지어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부정 논문은 일개인의 연구가 아니라 역사수정주의를 내세우는 일본 극우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파문은 확산되었다.<sup>40)</sup> 역사수정주의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지만, 일본 역사수정주의는 역사부정론으로 변질되었다.<sup>41)</sup>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역사수정주

38) 『kbs뉴스』 2021년 4월 13일.

39) 『오마이뉴스』 2021년 8월 6일.

40) 램지어 교수는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냈으며,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도쿄대에서 장학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하버드 교수로 임용됐다. 전공은 역사가 아닌 일본법과 기업법이다. 교수로 임용된 뒤에는 일본의 전범 기업 미쓰비시로부터 학술지원을 받았다. 하버드 로스쿨 홈페이지에는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로 소개돼 있다. 미쓰비시는 산케이신문과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극우 성향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다.(『중앙일보』 2021년 3월 24일)

41) 그동안 일본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정애, 「교차하는 권력들과 일본군'위안부' 역사 - 램지어와 역사수정주의 비판 -」, 『여성과 역사』 34, 한국여성사학회, 2021; 김정현, 「한중일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발굴 성과와 과제-역사수정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길항」, 『한일관계사연구』 69, 한일관계사학회, 2020; 막심, 「일본 민족주의와 역사수정주의의 영향과 시사점 : 쿠릴 열도와 독도 영토분쟁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 2020; 이기용,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와 새 한일관계의 정립모색 - 일본역사인식의 본질과 해

의 논리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해서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관동대지진 당시 6천 명이라는 조선인 희생자는 과장된 것이고, 설령 조선인이 살해당했다 해도 이는 정당방위였다고 강변하고 있다.<sup>42)</sup> 이러한 논리에 따라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는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추도사를 송부를 거부하고 있다.

일련의 램지어 사태에 대해 ‘위안부’와 관련된 비판적 연구는 상당한 논문이 축적되었지만<sup>43)</sup>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역사부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조경희에 의해 발표되었다.<sup>44)</sup> 그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왜곡을 ‘조선인=범죄자 프레임’, ‘공권력에 동화된 시각’의 키워드를 통해 램지어 논문을 비판하고 있다.

먼저 ‘조선인=범죄자 프레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램지어는 그의 논문에서 조선인 범죄와 관련하여 첫째는 통계적으로 조선인 범죄자가 많았고, 둘째는 1920년대 초 조선인 무장단체가 일본에 저항하는 테러를 계획·진행하고 있었고, 셋째는 지진 후 언론과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의 범죄 목격담을 보고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지진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들이 광범위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자경단원들을 살해했다는 설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법으로서의 독일역사인식, 『일본사상』 34,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8; 조경희,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국가주의·백래시의 연동 : ‘새역모’와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황해문화』 105, 새얼문화재단, 2019; 이규수, 「‘제특회’(在特會)의 역사수정주의와 우경화」, 『일본학』 43,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이미숙, 「일본 시민사회의 현재 : 공고화된 ‘역사 수정주의’와 ‘희망’을 전가당한 젊은 세대」, 『가톨릭평론』 24, 우리신학연구소, 2019; 김부자, 「피해증언과 역사수정주의적 페미니즘 : 구술사를 미래로 전하기 위하여」, 한국구술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국제학술회, 2019; 이은선, 「동아시아 역사수정주의와 평화 이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신학』 85,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2017; 임성모,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역사서술론 사카모토 타카오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82, 역사교육연구회, 2002; 이잔벨 마미, 「일본과 미국에 있어서 반지성주의의 확산 : Q아논과 반중환 감정」, 『동북아 문화연구』 6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1; 함동수,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내셔널리즘과 타자 인식」, 『일본역사연구』 17, 일본사학회, 2003; 권학준, 「현대일본의 국가주의와 역사수정주의」, 『일본어문학』 19, 일본어문학회, 2002; 이종국, 「일본 보수정치인들의 역사인식과 역사적 전개」, 『동북아역사논총』 51, 동북아역사재단, 2016.

42) 이규수,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부정」, 『시대정신』 11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21.1·2, 40쪽.

43) 박정애, 「교차하는 권력들과 일본군‘위안부’ 역사 - 램지어와 역사수정주의 비판 -」, 『여성과 역사』 34, 한국여성사학회, 2021; 한혜인, 「제국의 시선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 램지어 사태가 보여주는 것」, 『역사와 현실』 120, 한국역사연구회, 2021; 김창록, 「램지어 사태-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의 추가 사례」, 『역사비평』 135, 역사문제연구소, 2021; 김지민, 「미국시민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과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논쟁」, 『역사비평』 135, 역사문제연구소, 2021; 강성현, 「램지어 사태로 본 역사부정의 논리와 수법 비판」, 『황해문화』 111, 새얼문화재단, 2021(여름); 강정숙, 「램지어 교수 논문을 매개로 일본정부의 책임 다시 보기」, 『페미니즘 연구』 21(1), 한국여성연구소, 2021; 김은경, 「‘인가된 무지’와 전력적 무지가 낳은 참사, ‘램지어 사태’에 대한 관견」, 『역사연구』 41, 역사학연구소, 2021.

44) 조경희, 「마크 램지어의 역사부정과 소수자 혐오-」, 『역사와 여성』 34, 한국여성사연구소, 2021.

이에 대해 조경희는 램지어가 활용하고 있는 통계와 자료는 “당시 식민통치에 활용된 자료를 아무런 비판적 검토 없이, 심지어 그 당시의 저자보다도 불성실한 방식으로 통계 일부만을 인용해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램지어는 당시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권력관계와 조선인들의 반식민주의 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망설임 없이 불법화한다. 이것은 3.1운동 이후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불령선인’(不逞鮮人) 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는 램지어 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계성과 우려성을 밝혔다.

‘조선인 범죄자’ 혹은 ‘조선인 폭도’ 라는 고정된 프레임과 그로 인한 논리적 비약의 위험성은 램지어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그는 ‘조선인 범죄’ 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되고 구성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집단적 차별과 혐오를 낳아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까지 이어졌는지는 묻지 않고, 거꾸로 그 차별적 프레임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의 논조는 지금까지도 한반도 출신자에 대한 혐한 담론이 판을 치는,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연상케 하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일본의 현실에서 볼 때 명백히 혐오 발화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공권력에 동화된 시각’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비판하였다. 그동안 1923년 당시 일본의 공권력과 언론이 조선인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조장하고 조선인 학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 다수 밝혀져 왔다. 특히 또 야마다 쇼지(山田昭次)는 각 지역에서 경찰관들이 조선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도록 호소했던 점을 밝혔고, 경찰이 이를 은폐하고 사실을 위조했다고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sup>45)</sup> 그

럼에도 불구하고 램지어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전혀 무시하고(여기에는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조선인들을 테러리스트(terrorist)나 폭도(mob)로 표현하는 한편 학살의 주체인 자경단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대신한 사적 결사들(private bands)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아시다시피 자경단은 지진과 조선인 폭동설에 당황한 민중들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지역사회 유지들이 결성한 보안조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그 종류는 대략 3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지진 후 도쿄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조직이고, 두 번째는 각지의 안전조합, 보안조합 등 경찰의 보조 조직, 세 번째는 내무성의 지시에 따라 청년단, 제향군인, 소방단을 기반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sup>46)</sup>

45)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そ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2003.

46) 藤野裕子, 『民衆暴力: 一揆・暴動・虐殺の日本近代』, 中央公論社, 2020, 제4장 참조.

이러한 자경단은 관동대지진 지진 발생 후 조선인들이 방화를 하고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유언비어가 도쿄, 요코하마, 사이타마, 치바 등 관동지방 일대에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경단은 칼, 창, 총, 쇠갈고리(鷹口) 등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였다. 그런데 램지어는 일본정부, 경찰, 공안, 조선총독부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발간하는 자료를 과도하게 신뢰했고, 이에 대해 비판적 검토는커녕 오히려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램지어는 이러한 자경단의 학살을 ‘민중의 경찰화’라고 정당성을 부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램지어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6,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조선인 학살 희생자 수에 대해서도 “400명보다는 상당히 많고, 5,100명보다는 상당히 적다”고 그 규모를 축소한 것에 대해서 “식민지배와 피지배, 가해와 피해 관계의 불균형을 지우고, 제노사이드 피해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탈맥락화하는 역사부정의 전형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학살된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비난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조경희는 램지어의 논문에 대해 “자경단을 학살의 주체가 아닌 공권력을 대행한 지역결사로 보고, 조선인들을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로 재현함으로써 자경단에 의한 학살이 마치 조선인에 대한 정당방위였던 것처럼 역사를 왜곡했고, 학살의 규모와 심각성을 축소시켰다”고 연구의 진실성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비판하였다.



-국제학술회의- 관동대지진 학살사건과 역사수정주의 문제

---

## 일본 역사수정주의와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에 대한 역사교육

---

서 종 진(동북아역사재단)



# 일본 역사수정주의와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에 대한 역사교육

서 종 진(동북아역사재단)

## 1. 머리말

동아시아에서 과거사 문제가 지역 화합과 협력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갈등과 대립 요인의 하나가 역사수정주의의 세력의 영향력 증가이다. 일반적으로 역사수정주의는 난징(南京)대학살 부정론이나 아우슈비츠 학살사건 날조와 같이 역사적으로 실재한 사건을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전쟁과 식민통치 시기의 권력 당국이나 지배 측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거나 은폐, 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동아시아에서의 역사수정주의 세력은 전쟁책임과 전후보상, 식민지배 관련 문제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등장하였다.

‘자유주의사관 연구회’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 등은 기존의 역사관을 ‘도쿄재판 사관’이며 ‘자학적·반일적·암흑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의 주장은 난징대학살이나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같이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서의 책임문제를 부각시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은폐나 왜곡, 부정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들 역사수정주의 세력은 아사히(朝日)신문에 게재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사를 문제 삼거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용어 사용 제한, 교과서 관련 기사를 축소시키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sup>1)</sup> 이들은 역사적 사실에서의 통계의 부정확함 등을 문제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과 움직임이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도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sup>

1) 依義文, 『教科書攻撃の深層』, 東京, 學習の友社, 1997. 참조.

2)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통계 수치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난징(南京)대학살에서

이 발표문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을 둘러싼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을 과제로 한 것이다.<sup>3)</sup>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언론이 관동대지진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공격성’ 보도를 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자 추도식에 대한 동경 도지사의 태도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대한 역사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등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보수언론의 관동대지진에 대한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서의 역사교육과 함께 ‘새역모’ 계열 교과서의 관동대지진 기술 변화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 2. 일본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등장

일본 사회에서 역사수정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냉전 해체 이후라고 볼 수 있다. 패전 50년을 전후한 시기에 동경대학 후지오카(藤岡信勝) 교수는 『사회과 교육』 잡지를 통해 ‘근현대사 교육개혁’이라는 연재를 시작했다. 여기서 후지오카 교수는 기존의 교육과 연구에서의 ‘도경재판사관’과 ‘자학사관’의 극복을 과제로 내걸었다. 이어서 ‘자유주의사관연구회’를 결성하였고 이들은 언론출판계와도 연계하여 간행물을 발간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발신하였다. 일본 사회의 역사수정주의 세력은 자유주의사관연구회의 등장을 기점으로 하고 있으며, ‘새역모’의 결성 이후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것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의 희생자 수에 대한 것이다. 난징대학살의 희생자 수에 대해서 중국 측은 도쿄재판 판결에 근거하여 20만 명 이상, 난징군사법정 판결에 근거하여 3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2만~20만 명이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희생자 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笠原十九司, 「南京大虐殺と教科書問題」 『季刊 戦争責任研究 第36号』, 東京, 日本の戦争責任研究センター, 2002.

3) 발표문 작성을 위해서 姜徳相, 『關東大震災』, 東京, 中央公論社, 1975. 山田昭次,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東京, 創史社, 2003. 姜徳相·琴乘洞編, 『現代史資料6 關東大震災と朝鮮人』, 東京, みすず書房, 1963. 강덕상 저, 김동수·박수철 옮김, 『학살의 기억·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2005 (동경, 청문문화사, 2003), 강덕상, 야마다 쇼지 외,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 동북아역사재단, 2013. 등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자유주의사관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4)</sup> 1) 기존의 대부분의 역사학 연구와 역사교육은 미국과의 이해관계로부터 생성된 도쿄재판사관 또는 구소련과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코민테른사관’과 같은 타국의 국익에 봉사하고 일본 국가가 실행한 모든 것을 악이라고 규탄하는 자학사관에 의거하고 있다. 2) 헌법9조에 의거한 ‘일국평화주의’가 무너진 이상, 글로벌리즘과 전쟁 부정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전후 역사교육과 평화교육은 재검토하여야 하고 국익과 국방을 전면에 내세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자학사관에 근거한 역사교육의 결과, 반일적인 일본인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 일본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4) 새로운 역사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도쿄재판사관도 아니고 대동아전쟁 긍정사관도 아닌 제3의 길인 자유주의사관이다. 자유주의사관의 특징으로는 건장한 내셔널리즘, 전략적 리얼리즘, 탈이데올로기, 관료주의 비판, 통계 데이터의 중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비판적이고 자성적인 입장의 연구와 교육을 도쿄재판사관, 코민테른사관,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사관연구회는 도쿄재판사관을 비판하면서도 ‘대동아전쟁’ 긍정론의 입장도 아닌 제3의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이들은 출발 시점부터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부정론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변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기술이 교과서에 게재되면서 등장한 우익세력의 운동이 지방의회에서 전개되면서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자유주의사관연구회는 우익세력에 접근하여 동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역모를 중심으로 후소샤(扶桑社)판 교과서를 발간한 2001년 이후에는 일본(인)에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교과서에 기술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전후 일본의 역사 교육은 대부분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헌법 9조에 입각한 평화주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있었다. 반면에 이에 대한 반동 세력도 항상 존재하였다. 기존의 역사 교육에 대한 불만과 함께 새로운 전쟁과 평화 교육에 대한 잠재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언

4) 依義文, 『教科書攻撃の深層』, 東京, 學習の友社, 1997.; 高橋哲, 『戦争への教育』, 東京, 學習の友社, 2005. 등 참조

론에서는 기존의 역사교육을 비판하는 자유주의사관연구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보도를 하였고, 이러한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움직임은 기득권 세력의 ‘권위’에 도전하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세력으로서 비춰지면서 대중에게 접근하였다.

역사수정주의 세력이 역사학 연구자들과 교육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게 된 요인의 하나는 새역모와 같은 조직과 정재계와 언론계 등 여러 분야의 보수우익세력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학사관 비판에는 일본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프러스트레이션(*frustration*)을 충족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후 70년에 발표된 ‘아베담화’에서와 같이 명확하게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고 그 책임과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역사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실태를 직시하지 않고 책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반성과 사죄를 자학적이라고 보는 역사수정주의적인 역사인식이 표출된 것이었다.

### 3.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관동대지진 학살사건 관련 보도와 그 영향

일본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교과서공격’은 먼저 난징대학살을 비롯한 침략전쟁과 식민통치기의 사건에 대해 나타났다. ‘새역모’ 결성 이후 교과서공격은 특히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다. 교육기본법이 개정되고 교과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는 교과서 검정과정을 통해서 기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교과서공격이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이다.

제1차 아베정권에서 교육기본법 개정된 이후, 새로운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의거하여 제작된 첫 교과서 검정이 진행 중이었던 2010년 1월 25일 산케이(産経)신문에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의 희생자, 수업에서 근거 없는 ‘6,600명’”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관동대지진에 관한 교과서

기술에서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 희생자의 통계 수치에 오류가 있으며, 이러한 교과서로 진행되는 학교 수업은 ‘나쁜’ 역사수업이라는 내용이다<sup>5)</sup>. 일본교직원노동조합(이하 ‘일교조’)의 교육연구 전국 집회가 야마가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일교조의 사회과 교육 분과회에서 중학교 수업 사례의 하나로 관동대지진에 대한 수업이 보고되었다. 신문기사는 보고회에서 지진 후에 일어난 조선인학살과 관련하여 희생자 수 ‘약 6,600명’이 문제라고 하였다.

이 기사는 잡지 『SAPIO』에 2008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연재된 원고를 수정하여 출판된 서적을 인용하면서 작성되었다.<sup>6)</sup> 산케이신문사는 보수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사로서 과거 새역모와 함께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발간하였고, 새역모의 내부 분열 이후에는 ‘교과서 개선의 모임’과 함께 이쿠호샤(育鵬社)에서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이들은 영·미 등의 일본 관계 문서가 비공개 상태이므로 향후 전승국 측의 자료 공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사료 공개까지는 최저 50~60년이 소요되므로 현대사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관동대지진에서의 학살사건도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부족’으로 간주하고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학설과 통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이 기사에서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편찬에 영향이 강하다고 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조선인 학살에 관한 언급이 없다.” “문부과학성이 과거 10년의 교과서 검정에서 희생자 수에 관해서 검정의견을 붙인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산케이신문 기사 이후, 관동대지진에 대한 교과서 및 부교재의 기술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계속 되는데 그 내용은 당시 교과서 및 교재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관련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것이다. 먼저 2012년 6월 25일자 신문 1면에는 요코하마(横浜)시에서 발행하는 중학교 사회과 부교재 ‘와카루 요코하마’(『わかるヨコハマ』)의 관동대지진에 대한 기술

5)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犠牲者授業で根據ない‘6600人’」 『産経新聞』, 2010.1.25.

6) 工藤美代子,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眞實』, 東京, 産経新聞出版, 2009. 구도 미요코는 당시 ‘새역모’ 이사로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라는 조선인 희생자의 숫자는 당시 일본 내 ‘조선인’ 인구로 보아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당시 일본 사법성이 발표한 233명의 희생자 수를 강조한다. 다이쇼(大正)시대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이자 ‘민본주의자’로 알려진 동경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교수의 조사 결과가 2,613명이었음을 거론하면서 6,661명이라는 수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7)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犠牲者授業で根據ない‘6600人’」 『産経新聞』, 2010.1.25.

을 문제 삼는 기사가 실렸다<sup>8)</sup>. 과거에 발행된 판본에는 “자경단 가운데에 조선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도 있었다.”고 기술되었던 부분이 2012년 발간된 개정판에는 “유언비어를 믿은 군대와 경찰, 재향군인회와 청년회를 모체로 하여 조직된 자경단 등은 조선인에 대한 박해와 학살을 자행하고 또 중국인을 살상했다.”고 기술되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조선인 학살을 둘러싸고 그 수, 군과 경찰의 관여에는 복수의 학설이 있는데 부교재의 보다 상세하게 가필된 개정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요코하마시의 야마다(山田巧) 교육장은 부교재 제작 과정에서 절차상의 ‘불비(不備)’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7월 20일자 신문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2013년도에 2012년도 판본을 회수하고 내용을 ‘재개정’하였다.<sup>9)</sup> 야마다 교육장의 시의회 답변을 인용하여 부교재의 관동대지진 기술 내용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간주하고, 나아가 ‘학살’이라는 표현이 주관적이어서 종래에 사용하던 ‘살해’로 재개정을 언급했다.

또한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가 부교재 담당 과장을 관동대지진 관련 부분 표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문서결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하고 과장의 상사인 교육 차장 등 3명을 서면훈계 조치하였다.<sup>10)</sup> 2013년 5월에는 2013년도 판에서는 “살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도 있었다.”라고 구판(2011년)의 기술을 회복시키고 ‘박해’와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최종적으로 요코하마 시는 2013년 최신판을 배부하면서 2012년판 회수를 지시하였다<sup>11)</sup>.

근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을 둘러싼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움직임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2016년 8월에 동경 도지사에 취임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의 관동대지진 추도식과 관련한 행보이다.<sup>12)</sup>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희생자를 기리는 추도식이 ‘일조(日朝)협회’ 등 시민단체 주관으로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다. 역대 도지사는 이 추도식에 ‘우리나라(일본)의 역사 속에서도 드물게 보이는 실로 참혹한 사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추도문을

8) 「'軍や警察 朝鮮人虐殺' 横浜市教委 書き換え」 『産経新聞』, 2012.6.25.

9) 「朝鮮人'虐殺'→'殺害'」 『産経新聞』, 2012.7.20.

10) 「市教委課長を戒告」 『朝日新聞』, 2012.9.29. 「横浜市教委の課長戒告」 『産経新聞』, 2012.9.29.

11) 「横浜市教委 12年度版の回収指示」 『毎日新聞』, 2013.5.28.

12) 「小池氏「特別な追悼控える」」 『朝日新聞』, 2017.8.26.

보내왔다. 그러나 2017년부터 고이케 도지사는 도가 주최하는 범요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모든 희생자를 추도한다는 이유를 들어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에는 ‘일부 희생자를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통보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

도지사의 추도문 송부 중지 사태의 발단은 2017년 2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의원이 도지사에게 질의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자민당 소속의 고가(古賀俊昭) 의원은 추도비에 새겨져 있는 ‘6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비문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추도사 발신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이에 대해서 고이케 지사는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후 도지사의 적절한 판단의 결과가 추도문 송부의 중지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추도식을 주최하는 관동대지진조선인희생자 추도 실행위원회에서는 ‘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의 의향을 받아들인 움직임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논평하였다. 이러한 도지사의 움직임은 관동대지진 당시의 ‘학살의 역사를 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도지사의 추도문 송부 중지는 가해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계승하는 노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자이니치에 대한 헤이트스피치 등 배외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 4.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교과서공격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교과서공격은 교과서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교과서 검정 및 채택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역사수정주의 세력은 제2차 아베정권 하에서 진행된 ‘교육재생정책’을 추진하는 중심세력이 되었다. 교육재생실행본부장 출신의 시모무라(下村 博文)가 문부과학성 대신을 역

13) 安田浩一、『愛國という名の亡國』河出新書、2019.

임하였고, 교육위원회제도개혁 분과회에는 우익성향의 측근들이 요직에 임명되었으며, 교육재생실행회의에는 일본교육재생기구의 야기(八木秀次) 이사장 역임자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자학사관’에 근거하여 기술되었다고 비판한 역사수정주의 입장의 단체와 연계된 사람들이다.

이들이 추진한 교과서 관련 규정의 개정 가운데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관련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2014년 1월에 개정된 ‘교과용도서 검정 기준’이다. 그 내용은 역사수정주의 세력이 주도한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의 보고서 내용과 유사한 것이었다. 즉, 문부과학성이 고시한 ‘교과용도서 검정 기준’은 1) 특정 사항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할 것. 2) 근현대 역사적 사상(事象) 가운데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숫자 등의 사항에 대해서 기술할 경우에는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아동 또는 생도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없을 것. 3) 각의 결정 그 외의 방법으로 표명된 정부의 통일된 견해 또는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것에 의거한 기술이 되어 있을 것 등이었다. 이것은 초등학교 사회과, 중·고등학교 역사·지리·공민에 적용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들 교과서 관련 개정된 규정을 검정 과정에서 적용 가능하게 한 정부의 주장을 기술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검정 의견을 제시하여 기술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2)를 적용하여 이 규정에 의거한 검정 의견을 제시하고 기술 내용을 수정하게 하였다. 통설이라는 것은 학계의 연구 성과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표1>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어 그 내용이 수정된 사례이다.

〈표1〉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 검정 사례

	일본사A	일본사B
신청	“군대 경찰과 자경단이 6000명 이상의 조선인과 약 700명의 중국인을 학살하였다.”	“조선인 수천 명, 중국인 약 200명이 학살당했다.”
검정의견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위와 같이 검정 과정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검정의견이 제시된 결과, 기술 내용은 모호하게 되거나 ‘명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검정을 통과하였다. 작년 2020년 검정에서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에 대해서 검정의견이 제시된 것은 단순 오기 사례가 하나 있었고, 올해 고등학교 검정에서는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 ‘학습지도요령에 비추어서 취급이 부적절하다’는 검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서 검정의견 횟수가 줄어들고 의견도 간결하게 변한 것은 몇 차례 검정을 거치면서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어느 정도 정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 5. ‘새역모’ 계열 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기술 내용 변화

아래 <표>는 새역모 계열의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이들 사례를 통해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대한 교과서 기술 변화와 그 문제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sup>14)</sup>

14) 중학교의 이쿠호샤(育鵬社), 자유샤(自由社) 외에 참고로 고등학교 우익교과서인 메이세이사(明成社)를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표2〉 중학교 역사교과서(이쿠호샤, 지유샤)

출판사	구분	내용
이쿠호샤	2011	<p>&lt;관동대지진&gt; 1923(다이쇼 12)년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쿄와 요코하마 등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0만 명이 넘었다(관동대지진). 이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사이에서 불온한 기도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의 자경단 등이 조선인·중국인과 사회주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관동대지진 결과,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p>
	2015	<p>&lt;관동대지진&gt; 1923년 9월 1일,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도쿄·요코하마의 인구 밀집지를 직격하였습니다(간토 대지진). 이 지진은 사망자·행방불명자 10만 수천 명, 소실 가옥 약 45만 호라는 큰 피해를 가져오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주민들이 만든 자경단 등에게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또 지진 후는 고토 신페이 등에 의해 새로운 도시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p>
	2020	<p>1923년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동경/ 요코하마라는 인구 밀집지를 직격하였습니다(관동대진재). 이 지진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10만 수천 명, 소실 가옥 약 45만호라는 큰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끊어진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주민들이 만든 자경단 등에게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진재 후의 동경은 고토 신페이 등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p>
지유샤	2011	<p>&lt;관동대지진&gt; 1923(다이쇼 12)년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 도쿄와 요코하마 등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0만 명이 넘었다(관동대지진)②. 이 관동대지진 결과,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의 근대도시 조성에서 얻은 교훈은 많았고, 내진설계의 기준 설정이나 도시방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②이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사이에서 불온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주민의 자경단 등이 조선인이나 조선인으로 오해받은 중국인과 일본인을 죽이거나, 군인이 독단으로 사회주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도판 &lt;도쿄 혼조지구의 대화재&gt; 혼조 이시하라 방면 대선풍 진경 (에도도쿄박물관 소장) 도쿄 스미다가와 강의 동쪽 기슭에서는 지진에 의한 화재가 밀집한 가옥과 공장 자재로 번지면서 화염의 회오리가 되어서 약 4만 명이 도피할 길을 잃고 사망했다.</p>
	2015	<p>&lt;관동대지진&gt; 1923년 9월 1일 간토 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도쿄와 요코하마 등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10만 명을 넘었다(관동대지진). 이 간토 대지진의 결과,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p>

	<p>근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얻은 교훈이 많았고 내진 설계의 기준 만들기과 도시방재 연구가 시작되었다.</p>
2020 신청본	<p>1923(다이쇼12)년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도쿄와 요코하마 등 각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민가와, 중요 건축물, 문화시설 등이 소실되었고, 사망자는 10만 5천명에 달했다(관동대지진).</p> <p>관동대지진 결과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근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얻은 교훈도 많아서 내진설계와 도시방재 연구가 시작되었다.</p> <p>&lt;도판&gt; 고토 신페이의 동경 부흥</p>




<표3> 고등학교 교과서(명성사)

출판사	구분	내용
일본사 B 명성사	2012	<p>&lt;전후 공황과 관동대지진&gt;</p> <p>다이쇼 12년(1923) 9월 1일, 대지진이 관동 일원을 덮쳤고, 게이힌 지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관동대지진)③. 이로 인해 은행 소지의 어음이 결제 불능 상태가 되어서 일본 은행의 특별 용자로 일시적으로 버텼지만, 불황을 회복하지 못했다(진재공황).</p> <p>③ 대지진에 의한 피해는 전과 12만 호, 전소 45만 호, 사망자. 행방불명자 10만 수천 명에 이른다. 혼란 속에서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사카에와 이토 노에가 헌병 대위 아마카스 마사히코에게 살해되었다. 또한 조선인에게 불온한 움직임이 있다는 유언비에 영향을 받은 자경단에 의해서 조선인에 대한 살상사건이 빈발했다. 한편 조선인을 보호한 민간인과 경찰관도 있었다.</p>
	2021 신청본	<p>&lt;도판&gt; 관동대지진 1923년 9월 1일, 대지진이 관동 일원을 습격하여 약 10만 명의 사망자/ 행방불명자를 내고, 게이힌(京浜) 지대는 경제적 대타격을 입었다. 관광명소인 아사쿠사(淺草)의 료운각(凌雲閣)은 12층 가운데 7층 이상은 무너졌다.</p> <p>&lt;도판&gt; 아리시마 이쿠마(有島生馬) 그림 “대진(大震) 기념”</p> <p>&lt;도판&gt; 동경아사히신문(1915.2.4.) 백국 동정의금 모집</p>

새역모 계열 발간 역사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대한 교과서 기술 변화와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로 학살사건에 대한 서술을 보면 이에 대한 기술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당연히 학살사건의 계기가 된 유언비에 대한 기술도 연동하여 기술되지 않고 있다. 둘째, 학살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이쿠호샤 교과서 기술을 보면 학살의 주체를 자경단으로 기술하고, 학살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지 않고 ‘살상사건’, ‘살해’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학살사건에 대한 내용이 사라지는 대신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기술로 변화고 있다. 경제적인 피해라든지 도시계획과 함께 당시 도지사였던 고토 신페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넷째, 도판을 보면 대부분 파괴된 시가지와 함께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동경 도지사의 사진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도쿄 복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학살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도판 대신에 경시청이 제작한 ‘유언비어 방지 전단지’와 같이 학살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표4〉 일본 교과서의 관동대지진관련 도판

		
아사쿠사 십이층	유언비어 방지 전단지	고토 신페이

## 6. 맺음말

일본 사회 내의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대는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의 본질을 왜곡 은폐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일본 내 보수우익과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주장들을 근거로 신문보도가 이어지고 신문보도가 문제로 삼은 부분의 교과서 기술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역모와 같은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역사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보수언론을 통한 교과서

공격도 역사수정주의 세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역모 계열의 역사교과서의 점유율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이들의 교과서공격으로 다른 교과서의 기술 내용이 축소되고 모호하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최근 희생자 추도식에 도지사의 추도문 송부가 중지된 상황에서 추도비를 철거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결국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목표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에서 지우려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일본 전체 인구의 대부분은 전후 세대가 차지하고 있다.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통치라는 자국의 과거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접하던 세대가 적어지고 이제는 학교교육과 교과서를 통해 과거사를 접하고 배우는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등장한 것이다.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사건은 근대 식민지 지배의 모순과 일본 내 민족차별의식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로 기억되고 미래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관동대지진 당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식민지민의 신분으로 이국땅에 '이주'하여 생활하던 조선인과 중국인,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 등이 무차별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상황에 있었던 한일관계를 바라볼 수 있으며, 현재 '자이니치' 코리언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식민주의, 인종주의, 민족차별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직시하는 역사인식 형성에 힘써야 할 때이다.

